

| 2026 지방행정 트렌드

유수동 성과확산센터장

주민참여의 진화, 주민이 주인이 되다 : 지방을 움직이는 힘! 주민자치회

-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, 스스로 지방을 살리고, 새로운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어갑니다.

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기준,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방주도 활력 증진

-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맞춤형 인구활력 정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.

청년의 삶을 바꾸는 종합지원, 지속가능한 지역을 여는 길

- 쉽고 있는 삶,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방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합니다.

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전략, 지역과 주민이 완성하는 에너지대 전환

-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, 중앙이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.

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다 : 5대 초광역권-3대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

- 5극 3특으로 커지는 지방의 미래, 자치분권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합니다.

지방의 미래를 여는 힘 : 맞춤형 재정분권 실현

-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재정분권으로, 지방의 내일을 설계합니다.

현금보다 강한 유효수단 : 소비 확대에서 재정 확충까지, 지역화폐의 선순환 전략

- 지역특성에 적합한 제도 설계로, 지역화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합니다.

공공 알고리즘 검증시대 : AI 행정의 그림자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성

- AI 행정의 도입과 확산 속에서 공공성·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합니다.

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 :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

- 데이터 기반 분석과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혁신합니다.

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,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안전과 민생치안

-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새로운 도전, 주민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치경찰제가 시작됩니다.

01

돌아보는 2025 지방행정 트렌드



주민 관점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다

- 지방행정은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, 주민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
 - 이는 정책과 행정의 중심축을 '정부 관점'에서 '주민 관점'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중요한 변화임
 -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, 정책 불신 등의 문제로 인해 이제는 주민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,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'주민 관점의 지방행정'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해라고 할 수 있음



현장과의 접점이 강화되다

- 주민 중심 행정이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진전되면서, 지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, 즉 '현장'에서의 만남을 핵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
 - 지방행정은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맥락 속에 스며드는 조력자로 진화하고 있음
 - 특히, 급격한 환경변화와 복잡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며, 이는 현장 점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



지방이 주체로서 자리 잡아간다

- 지방행정은 주도적인 정책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, '지역주도형 지방행정'이 본격화되고 있음
 -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판단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·조정하고 있음
 -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

〈 2025 지방행정 트렌드 〉

- **다이버시티** | 외국인 인력, 지방을 되살릴 열쇠
- **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** | 원격의료의 새로운 풍경
- **하이브리드 지방행정** |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, 특별과 통합, 그리고 제3의 형태
- **로컬 그린 리더십** |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
- **153만호 빈집의 역습** |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
- **농촌 공간의 재창조** | 농촌의 새로운 얼굴,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
- **지방교육의 전환점, 에듀테크 시대** |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
- **재난·위기관리의 나침반** | 지방주도의 재난·위기관리, 새로운 기준이 되다
- **이제는 지방시대** | 지역맞춤형 지방분권,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

02

다가온 2026 지방행정 트렌드



주민참여의 진화, 주민이 주인이 되다 : 지방을 움직이는 힘! 주민자치회

-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핵심 주체이자, 풀뿌리 민주주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임
 - 즉,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
 -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의 제도적 실험이나 행정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,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장하는 생활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전환할 것임



지방소멸 대응의 새로운 기준,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방주도 활력 증진

- 생활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주도적 지방소멸 대응을 통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되살리고,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임
 - 인구의 시공간적 흐름 특성에 근거한 지방주도 맞춤형 인구활력 증진 전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
 - 기존의 관(官)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, 민·관·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의 활력 증진을 실현해 나갈 것임



청년의 삶을 바꾸는 종합지원, 지속가능한 지역을 여는 길

- 청년의 잠시 멈춤도 삶의 한 과정으로 인정하고, 이를 포용하는 종합적·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세대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
 -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과 재도약의 기회가 제공되면서, 청년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더 이상 선언적 차원의 '청년지원 강화'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, 청년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, 사회적·문화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



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전략, 지역과 주민이 완성하는 에너지대전환

- 지방이 주도하고, 주민이 체감하며, 중앙이 지원하는 삼각구조는 에너지대전환을 끝까지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
 - 지방은 권한과 책임을 통해 앞장서고, 주민은 참여자로서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며,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·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에너지대전환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정착할 것임
 - 에너지대전환은 우리 지역의 에너지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임



진정한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지다 : 5대 초광역권-3대 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

- 5곡 3특 구상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서, '서울 중심의 나라'에서 '지방이 함께 이끄는 대한민국'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됨
 - '지방이 잘 되어야 국가가 산다'는 원칙 아래, 초광역권과 특별자치도의 자율성 강화,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함께, 청년 및 지방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를 창출하는 분권형 성장전략이 주목받게 될 것임
 -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초광역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



지방의 미래를 여는 힘 : 맞춤형 재정분권 실현

- 앞으로의 분권은 단순한 사무이양을 넘어,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심화·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
 -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
 -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실현될 때, 재정분권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



현금보다 강한 유효수단 : 소비 확대에서 재정 확충까지, 지역화폐의 선순환 전략

- 정책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고, 지역특성에 적합한 제도설계를 통해 지역화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
 -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원이 의무화된 상황에서, 지역화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적·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임
 -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, 소상공인 보호, 지역공동체 연대·협력 등 지역의 경제사회적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



공공 알고리즘 검증시대 : AI 행정의 그림자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책무성

- AI 행정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책무성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
 - AI를 제대로 활용하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, 동시에 행정의 공정성·투명성을 훼손하고 주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
 - 공공성과 투명성,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, 행정 프로세스 설계, 주민과의 공유를 통해 시가 지방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본격적으로 결합될 것임



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 : 지방의회 의 디지털 전환

-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AI가 깊숙이 스며들면서, 의정활동의 AI 메이트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됨
 -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동료이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
 - 지방의회 의 디지털 전환은 지방의회 내부혁신을 넘어,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임



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, 지방이 책임지는 주민안전과 민생치안

-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처리하면서 지방주도형 치안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
 - 그동안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현장이 체감하지 못하였으나, 이제는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온전히 이양하는 광역단위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것임
 - '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'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실현하고, 경찰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

03

자치분권을 바탕으로 국가균형성장에 도전한다



주민중심·지방주도·현장중시의 자치분권 강화

- 오늘날 우리사회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, 지역 간 불균형 심화, 지역활력 저하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
 -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행정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이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함께 견고한 지방자치가 뒷받침되어야 함(유수동, 2025)
- 2026 지방행정 트렌드는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
 -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통찰과 방향성은 오늘의 지방행정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
- 주민과 함께 지방이 주도하고, 현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반드시 열려야 함
 - 이는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,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임

참고문헌

- 유수동(2025) 책임읍면동제에 대한 평가: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인식을 중심으로. 「한국지방자치학회보」, 37(3): 31-61.
- 유수동·주희진·유자영·유보람·양원탁·문혜리(2025) 「2026 지방행정 트렌드 분석 연구」.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
내용문의

-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(033-769-9846, soodongyoo@krila.re.kr)